광주시 공무원·상인대표 전국 우수 전통시장 가보니

부산 자갈치 상인들이 사업비 부담 재건축
창원 가음정 시설 개선 철저히 고객 위주로

양동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시설 개선, 상인 자구노력,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전통시장 시설개선이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한 아케이드·주차장 설치, 간판 정비 등에 한정돼 있었던 반면 부산 자갈치시장과 창원 가음정시장 등 다른지역 우수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직접 투자도 더해져 리모델링을 넘어 재건축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시설서 운영체계까지 꼼꼼히 살펴
"상인들 자구노력·서비스 향상 노력 중요"

광주시는 민선 5기 현안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광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대표 31명과 시·자치구 직원 5명 등 36명을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 보내 벤치마킹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부산 자갈치시장의 경우 기존 전통시장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시장 부지에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407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중 상인들의 자체 부담금은 100억원에 달하며 나머지 307억원은 국비(109억원), 시비(54억원), 부산도시공사 투자(144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 건물은 부산시가 보유하며 현재 부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돋보인 것은 상인들의 자구노력이었다. 상인들이 전체 사업비의 24.57%를 스스로 부담하며, 소유권도 부산시에 넘길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다.

창원 가음정 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투명한 아케이드를 최대한 높이 설치해 쾌적함을 강조하고, 점포의 진열선을 일률적으로 맞춰 통로를 확보했다. 통로 바닥은 물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일을 깔고 하수 유입구를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한 양동시장, 대인시장 등과는 디자인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견학한 상인대표들의 평가다.

김영호(53) 광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은 "우수전통시장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그 시각에서 시설을 바꿔나갔다"며 "상인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한발 양보하며,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직접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단순히 시설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계까지 꼼꼼히 살폈으며, 이를 광주의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계시키도록 하겠다"며 "상인대표 역시 자구노력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0억원씩 5년 동안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광주지역 18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국내 우수전통시장 견학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수시장 견학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에는 18개의 등록 전통시장, 9개의 무등록 시장, 5개의 상점가에 모두 4300여개의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대기업 SSM 등의 진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대표 31명이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 창원 가음정 시장 등을 방문해 각 시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사회복지 예산 국고 지원 늘려달라"

시·도 지방재정협의회…광주시 1170억·전남도 1905억 요청

기획재정부, 예산 10% 절감 긴축 재정 요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3일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회복지비 국고지원을 확대해줄 것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반대, 국비보조비율 증대, 지방세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클린디젤 사업 등 4개 사업에 1170억원, 전남도는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 등 4개 사업 19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필수사업 예산 지원 및 국비 지원 증액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 예산 절감과 대규모 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등 10대 원칙을 강조하며 사실상 '긴축 재정'을 요구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 기조실장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실·국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재원배분 방향,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전략인 일명 '10-10 전략'(10% 절감, 10대 원칙)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시·도는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예산당국에 전했다

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밝힌 10대 원칙은 ▲기획요구단계 예비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강화 ▲재정지원 이전에 민간 지자체 시행 가능성 검토 ▲대규모 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초기장비 시설비와 운영비 함께 검토 ▲핵심 국정과제 위주 사업 집행 ▲국고보조사업 도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종료 등이다.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경우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클린 디젤(100억원), 에코폐기물단지(200억원), 연구개발특구(800억원), 하이테크몰드 마케팅허브구축(70억원), 전남도는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개설(100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건의 1700억원),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100억원), 해상풍력 실용화센터 건립(5억원)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 특단대책 필요" 전경련 경제硏 보고서

자체 세수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파산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소는 3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자료를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서 올해 지자체의 순계예산(일반·특별회계 사이의 중복분 제외 예산)은 138조9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7% 증가에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63.4%에서 올해 52.2%로 떨어졌고, 지난해 기준으로 10~30%인 지자체가 138곳으로 전체의 56%나 됐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절반을 넘는 55.7%에 달했다.

한경연은 "파산제도 등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가 미비해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무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정부, LH 국책사업 손실 보전 검토

내달초까지 퇴출 사업장 선정 등 대책 마련

정부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LH공사가 벌이고 있는 전국의 개발사업 중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선별해 사업지구 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LH공사는 참여정부 시절 너무 과도하게 정부 지원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본다"면서 "실무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공사의 개발사업 중에 철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논리가 더 작용하는 것으로서 시점을 산정해 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9월초께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H공사의 총부채는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에서 7월 말 현재 118조원으로 7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하루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만도 수십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LH공사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에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